

# 新經濟와 企業經營



송기철

<고려대학교 명예교수>

■ 目 次 ■

- 1. 93년이라는 해
- 2. 지난날의 우리경제
- 3. 신경제 5개년 계획
- 4. 기업의 생존·발전 전략

## 1. 93년이라는 해

어느 해 인들 중요하지 않은 해는 한 해도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93년이야말로 우리에게 있어선 정말로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그것은 제6공화국이 막을 내리고 김영삼정부가 막을 올리는 첫 해가 된다는 것을 계기로 해서 전개되는 정치, 경제, 사회등 각 분야에서 변화가 있을 것이고 그의 변화가 적절한 개혁적 변화이냐 아니냐 또한 그의 깊이와 넓이가 어느 정도이냐에 따라서 우리 개인 뿐만 아니라 가정 그리고 기업과 국가에 까지도 결정적 충격을 주어서 그것이 이들 개인, 가정, 기업, 국가란 여러 존재의 현재와 미래에 좋은 발전적 방향으로 혹은 퇴행적 쇠퇴의 방향으로 갈 것이 결정되는 갈림길에서 있는 결정적 해이기 때문이다.

3공의 군사혁명이후, 4공의 유신 그리고 이은 5공, 6공의 군사문화를 바탕으로 30여년에 걸쳐 굳어져 버린 군사통치문화를 어떻게 마찰을 적게 하면서 슬기롭게 청산하고 문민통치문화를 올바르게 정립하면서 그를 최단시일 안에 폭 넓고 깊게 확립하여 개인, 가정, 기업, 국가에 걸쳐 있는 변신의 폭을 구조적으로 확립하느냐 하는 과제가 93년에 우리에게 부과된 커다란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김영삼 문민정부는 이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 취임초에 국정의 3대 목표를 부정부패의 척결, 경제의 활성화, 국가기강의 확립에 두고 국정을 수행해 갔다.

초기에 가장 역점을 둔 것은 부정부패의 척결이었다. 「로마 흥망사」를 토대로 해 그 막강하던 로마제국이 망한 5대 원인을 보면 ① 이혼의 증가 ② 유흥을 위한 세금증대 ③ 향락 ④ 부패 ⑤ 종교의 쇠퇴로 보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에 부정부패

\* 편집자註: 본 원고는 금융실명제 실시 이전에 기고한 것임.

의 척결을 국정목표의 앞에 둔것 그 자체는 잘 한 것이고, 그것이 어느 정권밑에서 보다도 과감했던 것에 국민들의 공감을 일으켰던것도 사실이였으며, 국민의 93%가 지지하는 국민여론을 얻은 것도 이를 배경으로 한다.

물론 그 대상과 심도 그 방법과 기간 등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이러쿵 저러쿵 말이 많은 것도 사실이고, 앞으로 계속적으로 꾸준히 제도적으로 과감하게 부정부패 척결이 이루어져야 함은 더 말할 필요도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

국가기강의 확립이 또한 중요한 일임에는 아무도 부인을 하지 못한다. 각 조직체 마다 「민주주의」와 「민주주의사상」이 그릇 이해되고 도입되어서 평등사상을 넘어서 개인주의, 이기주의의 더 나아가서 집단이기주의에 흐르는 나머지 각 조직체마다 기강이 서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아 그의 재확립이 긴급하다는 것은 역시 중요한 국가시정목표가 아닐 수 없다.

개인주의와 민주주의를 기본으로 하는 미국에서조차도 나라고 하는 I가 기본이요 바탕이지만 그러나 우리들이라는 가정, 기업, 국가, 사회의 일원으로서의 우리들 즉 We가 재삼 강조되고 있는 미국의 현실로 보더라도 국가, 기업, 가정등 사회기강의 확립이라는 것은 절대적인 것으로 보여지기도 한다.

## 2. 지난날의 우리경제

어느 정권 교체기에도 부정부패의 척결과 국가기강의 확립에 노력을 했고 이것이 가시적으로 성과를 보이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물론 이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제도적으로 정착되어 그런 일들이 언제 있었던가 하는 역사적 유물로 이야기꺼리가 될 정도로까지 되어야 함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했다는 것이 지금까지의 역사적 교훈이다. 김영삼정부가 이들 두 과제를 어떻게 풀어 정

착시키느냐는 앞으로 더 두고 보아야 할 일로 생각이 된다.

이들 역시 커다란 과제이기도 하지만 문제는 경제의 번영이 사실은 더 큰 과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한다. 그것은 경제와 관련이 있는 경제학자이니 아전인수격으로 그리 생각한다고 할지도 모르나 모든 문제는 국민들이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야 한다는 것이 기본사상에 입각하는 것이다.

우리가 반만년래의 빈곤을 씻고 우리도 한번 멋지게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 보자는 구호 밑에 의식주를 중심으로 하는 국민기본생활을 확보했고 중진국에 진입 선진국으로의 도약을 지향해 왔던 것이 현실이었다. 그리고 국제적으로 볼 때에도 높은 평가를 받아 온 것이 사실이다.

물론 급속한 경제발전의 추구 그늘에는 나름대로의 문제점이 없지 않았던 것도 사실이다. 보는 사람의 시각에 따라선 군사문화를 바탕으로 한 경제개발이라는 관점에서 혹평하는 사람도 없지 않으나 하여간 3공과 4공을 통한 박정희대통령하의 우리 경제는 비약적인 발전을 했고 경제의 기틀을 상당히 마련한 것이 사실이었다. 5공에 있어서는 사회간접자본의 투자소홀, 비생산분야에의 투자등 여러 실책이 있었으나 물가안정, 국제수지균형 그리고 성장의 유지란 업적을 보인 것이 사실이다.

문제는 6공 이후 특히 88올림픽을 치른 이후의 우리 경제는 그 올림픽 개최의 이점을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그의 부작용이 나타나기 시작하여 국민들의 근검절약하는 국민정신이 사라지면서 더럽고, 위험하고, 힘드는 일은 하지 않으려는 3D현상이 두들어지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사치풍조가 늘어나고 재테크를 한다고 투기풍조까지 일어 낮은 근로, 낮은 저축, 낮은 투자로 국제경쟁력이 급격히 약화되는 국면에까지 이르게 되어 수출의 둔화를 초래하여 국제수지적자가 늘어나게 되었다. 그리고 물가도 상당히 오르게되고 수출둔화로 경제성장도 떨어지고 특히 생산분야에의 투자가 둔화되는 등 경

쟁력 약화가 거의 모든 산업에 걸쳐 넓어졌고 심화되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이에따라 사회기강이 문란하게 되어 사회적 범죄가 늘어나고 이기주의, 집단이기주의가 팽배해져서 지역분쟁, 특히 노사분규가 격화함에 따라 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노동기강해이에 따른 불량품 증대와 원가상승 등으로 급격한 기업경쟁력 약화를 초래했다.

이에 도덕성이 상실되고 리더쉽이 취약한 6공 정부는 적절한 대응책 마련에 실패함으로써 고금리에다가 고임금, 고임대료, 고준세금등 가격인상으로 고물가 현상을 초래했고, 국제경쟁력 약화는 국제수지에 있어서 적자의 급증과 부실기업증가와 재테크의 성행으로 투자이익 감퇴로 부실기업 특히 중소기업의 부실화가 늘어나서 경제성장이 낮아져 우리가 추구하던 저물가, 국제수지흑자, 높은 경제성장이 모두 위기국면에까지 이르고 외국의 언론기관들도 「삼페인을 너무 일찍 터뜨렸다」라든가 「네마리 용증에서 지렁이로 전락했다」든가 하는 혹평을 받게끔 되어 경제우등생에서 경제열등생으로 까지 전락하는 경제위기국면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김영삼문민정부는 이 경제위기국면을 극복하고서 또 다시 국민들에게 일하는 즐거움을 주고 기업가로 하여금 기업하는 즐거움을 안겨주어 경제를 소생시키고 한발짝 더 나가서 국제화, 선진화로 선진경제국으로 도약하는 책무가 맡겨진 것으로 보여진다.

김영삼문민정부도 그러한 사정을 감안 국정최대 목표를 경제의 번영으로 잡은 그 자체에 대해서는 타당한 것으로 보여진다. 경제전문가 입장으로 볼 때에는 경제의 번영을 국정목표의 맨 앞에 내세우지 않는 것을 오히려 우려하는 입장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여간 정부는 이런 관점에서 우선 내놓은 것이 「신경제 100일 계획」이었다. 이 「신경제 100일 계획」은 김영삼정부가 출범한 이후 93년 상반기에

서 93년 하반기에 발표 실시될 「신경제 5개년 경제계획」 즉 93년 하반기부터 김영삼정부가 물러나는 98년 까지의 「경제 청사진」을 내놓기까지의 과도기적 경제계획과 시책의 청사진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신경제 100일 계획」에 따라서 여러가지 경제시책이 마련, 실천되었다. 김영삼정부의 경제기본기조는 드러내 놓고 그런 말을 하지는 못하고 있지만 사실은 경제학적으로 이야기 한다면 일종의 「소득정책」을 펴 보자는데 정책기조가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 소득정책이란 경제를 구성 각 부문을 낮은 저(低)로 몰고가서 가격면에서의 경쟁력을 갖고자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낮은 금리, 낮은 임금, 낮은 임대료, 낮은 환율, 낮은 세금, 낮은 원자재 등으로 몰고가서 낮은 물가로 낮은 조세부담으로 가정경제에 도움을 주어 저축을 늘리게 해서 그를 생산분야에 투자를 촉진시키자는 것이다. 이런 일련의 선순환(善循環)은 기업에도 미치게 되어 낮은 임금, 낮은 금리, 낮은 기업부담금으로 기업의 가격경쟁력을 높이고 이것이 높은 수출, 높은 매출액, 높은 기업이익, 높은 기술투자를 포함한 생산투자로 연결시키자는 것으로서 이러한 선순환과정을 정부에서도 기대해 보자는 것이다. 즉 조그만 정부, 높은 행정서비스로 국민들에게 보다 싼 행정서비스를 추구하면 싼 정부, 싼 기업, 싼 가정으로 이것이 총체적으로 대한민국의 국제경쟁력을 높이는 길이요, 이로써 고도성장, 국제수지의 흑자화, 물가안정으로 연결시키자는 것이 기본 구상이라 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소득정책이 국민들의 자발적 참여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이상이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 내건 구호가 「고통의 공동분담」이었다. 우선 정부가 내 건 것은 정부서부터 위에서의 고통의 공동분담으로서 공무원의 봉급동결, 재정의 감축에 의한 중소기업에의 지원확대, 재정감축을 위한 행정개혁 등등 정부 자체의 자세전환을 전제로 기업과 가정

에 이의 공동참여를 촉구한바 있다.

이런 정책기조 밑에서 정부의 「신경제 100일 계획」은 100일 동안의 우선 「신경제 5개년 계획」을 작성하고 93년 상반기에서 하반기로 옮겨가는 100일 사이에 급하게 해야할 급격한 과도기적 경제조치로 하반기에 전개해야 할 정지작업을 해야 한다는 입장에 놓여져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따라 우선 금리인하로 기업금융부담을 줄이려고 금리인하를 했고, 속출하는 중소기업의 도산을 막고자 중소기업의 자금공급확대, 기업에의 준조세적 성격의 자금부담금지 등등 시책으로 100일 계획에 성과를 거둘 것을 기약했던 것이다.

침체된 경기를 되살리기 위해서 김영삼 문민정부의 「신경제 100일 계획」이 지난 6월말로 끝난바 있다. 7월부터는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개선하고 신한국 건설을 위한 「신경제 5개년 계획」이 본격적으로 가동하게 된다.

김영삼 문민정부는 출범후 침체된 경제상황속에서는 본격적인 경제개혁을 수행할 수 없다는 인식아래 「경기의 활성화», 「중소기업의 구조개선», 「기술개발촉진», 「기업활동의 자율성 재고», 「농어촌구조 개선», 「기본 생활품가격 안정», 「공직자의식개혁」등 7대과제 50개 세부추진시책을 마련했었다.

「신경제 100일 계획」의 골자는 각종 경제행정규제 완화와 함께 충분한 자금지원을 통해 기업들의 투자마인드를 부추기고 각계 각층의 고통 분담을 통해 물가를 안정시키겠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그 동안 기업활동을 저해 해온 각종 경제행정규제완화 대상 6백70개중 절반 정도는 세차레에 걸쳐서 대폭 개선했으며 나머지는 하반기에 지속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라고 한다.

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으로는 지난 1월에 이어서 3월 하순의 규제금리 인하, 1조4천억 원에 이르는 중소기업 구조 개선자금 지원책 등이 마련되었었

다.

이 밖에 전년동기 대비 19%에 이르는 통화공급등으로 그 동안 심각한 자금난을 겪었던 기업들이 최근들어 풍부한 자금혜택을 받고있다. 정부의 이 같은 노력에 힘입어 「신경제 100일 계획」의 효과가 어느 정도는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우선 증시가 살아났고 기업의 투자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가운데 경제가 조금은 꿈틀대기 시작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느낌을 주는 측면도 있기 때문이다.

기업측도 제품가격의 동결 내지 가급적 억제하는 가시적인 성과로 「보답」하겠다고 다짐한 바 있다.

하여간 「신경제 100일 계획」이 안정이나 성장이냐로 많은 논쟁이 있긴 했으나 일단 경기촉진이란 관점에서 통화정책을 집행했으며 그것도 주로 중소기업지원에 주력됐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어 경쟁력강화와 투자촉진을 위해서 금리인하가 강력하게 이루어졌다. 인위적 측면이 강했다는 데에 문제가 있기는 했지만 하여간 10%선 까지로의 강제인하와 낮은 재정부담, 낮은 세금, 낮은 환율등 소위 소득정책의 강행으로 우리 경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지작업을 하게 했던 것이 「신경제 100일 계획」의 커다란 내용이었다.

그러면 1백일이 지난 오늘날 그 구체적 성과는 어떻게 되어 있는나를 일단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지수상으로 보아 93년 상반기까지는 「신경제 100일 계획」의 기간으로 볼 수 있는데 성장은 어느 정도의 성과가 있었지만 그 내용이 문제인듯 하다. 그것은 일본 엔화의 강세와 중국 특수에서 온 것으로 우리 자체의 경제력에서 온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경기를 뒷받침 하기 위해 적지않은 통화가 공급되었지만 이것이 금리인하로 직결되지 못했고, 생산적 투자에도 효과적으로 연결되지 못했고, 증권시장 개방에 따른 외자도입으로 막대한 외자를 유

입, 통화량 증발의 커다란 유인이 되고 있어 물가 불안을 재촉할 수 있는 한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또 그들 자금이 자본시장에서의 버블경제를 재촉할 수도 있고 또 그 자금이 일시에 빠져 나간다면 그 결과는 감히 파괴적이 될 것 같아서 우려되기도 한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고통의 분담이 초기에는 많은 호응이 있어서 1백일 계획의 성과에 크게 기여 하더니 문제의 현대그룹 노사분규에서 볼 수 있듯이 큰 파동을 겪어 경제 사회 전반에 아주 나쁜 영향을 미쳐서 앞으로의 「신경제 5개년 계획」에 큰

부담을 줄 것으로 보여져 다른 분야에서의 집단이 기주의의 만연과 겹들여 걱정이 아닐 수 없다. 정말로 고통의 공동분담이 진심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 경제는 좌초할지도 모른다는 위기의식을 갖고 노사정 모두가 「신경제 5개년 계획」 동안에 일관하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보여진다.

한편 「신경제 100일 계획」의 평가를 놓고 여러 사람이 여러 각도에서 하고 있어서 일률적으로 무어라고 할 수는 없으나 어느 신문보도에 의하면 그의 평가는 E, 즉 70점 정도가 아닌가 하는 평가를 경제계와 경제부처 자체에서도 나오고 있다는 것이

<표 1> 신경제 5개년계획의 총량전망

구 분	단위	'93	'94	'95	'96	'97	'98	93~98년
▲성 장	%							
G N P	"	6.0	7.1	7.2	7.1	7.0	7.0	6.9
총 소 비	"	6.1	6.5	6.5	6.4	6.4	6.4	6.2
고 정 투 자	"	4.2	7.0	7.8	8.7	8.9	9.2	7.6
수 출	"	9.2	8.1	8.3	8.1	8.0	7.8	8.2
수 입	"	5.3	6.1	7.6	8.2	8.5	8.6	7.4
▲국 제 수 지	억달러							
수 출	"	823	901	993	1,101	1,226	1,363	※1,363
수 입	"	813	876	958	1,053	1,161	1,281	※1,281
무 역 수 지	"	10	25	35	48	65	82	※ 82
경 상 수 지	"	△14	0	9	21	37	53	※ 53
▲물 가	%							
생 산 자 물 가	"	1.8	1.8	1.7	1.6	1.5	1.4	1.6
소 비 자 물 가	"	4.9	4.3	3.7	3.6	3.2	2.9	3.7
G N P 디플레 이 터	"	5.3	5.3	4.8	4.5	4.1	3.8	4.6
경 상 GDP	조 원	256.6	289.5	325.3	364.3	405.5	450.5	※ 450.5
경 상 GNP	억달러	3,219	3,643	4,189	4,849	5,616	6,480	※ 6,480
1 인 당 GNP	달 러	7,306	8,196	9,339	10,716	12,306	14,076	※14,076
저 축 륜	%	34.7	35.4	35.6	38.2	36.8	37.5	※37.5
투 자 율	%	35.1	35.4	35.4	35.8	36.2	36.7	※36.7

(△은 적자, ※은 기간말 기준)

다. 물론 이 점수에 대해선 많은 논의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사정평점이 90점 이상이 나왔음에 반하여 경제평점은 70점으로 나온 것은 크게 문제가 아닐 수가 없다.

그런데 이 경제평가란 지난 날의 우리 경제가 너무나 나빴기 때문에 100일 안에 높은 평가를 받을 정도로 기대한다는 그 자체에 문제가 있고 이것은 「신경제 5개년 계획」에서 기대를 걸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로는 경제이념 경제목표 경제시책에 통일을 보지 못하고 있는데다가 그를 집행하는 각 부처장관들 사이의 보조가 맞지 않아서 각각 팀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모든 시책이 동서남북으로 각개 약진하고 있는 것 같아 정책이 붕 떠 있는 느낌을 주고 있으며 그 두드러진 한 예가 바로 노동정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하여간 이러한 사이에 「신경제 5개년 계획」이 마련되고 93년 하반기부터 그의 집행이 이루어지고 이에 따라 김영삼 문민정부의 평가가 나오게끔 되어 가고 있다.

### 3. 신경제 5개년 계획

그러면 「신경제 5개년 계획」의 총량전망을 보면 <표 1>과 같다. 이표에 의하면 계획기간 중에 GNP성장률은 6.9%, 총소비율은 6.2%, 고정투자율은 7.6%, 수출증가율 8.2%, 수입증가율은 7.4%로 되어 있다. 그리고 국제수지 상황을 보면 98년에 수출은 1,363억 달러, 수입은 1,281억 달러로 무역수지는 82억 달러 경상수지는 53억 달러의 흑자를 보일 것이며 93년인 금년에 무역수지에 있어서 10억 달러의 흑자를 보이리라 한다.

물가를 보던 생산자 물가는 계획기간중 1.6% 상승, 소비자 물가 역시 동기간에 3.7% 상승, GNP 디플레이터는 계획기간중 4.6%가 되리라 한다. 그리고 경상GDP는 98년에 450조5천억원, 경상

GNP는 98년에 6,480억 달러, 1인당 GNP는 98년에 1만4천76달러가 되리라 한다. 또 저축률은 98년에 37.5%, 투자율은 36.7%가 되리라 한다.

그리고 신경제의 주요 내용을 보면

- 전체 공무원 정원 동결
- 공공요금의 단계적 인상
- 유류특소세 목적세전환
- 추곡수매량 축소
- 종합소득세 세율체계조정(최저율인상, 최고율인하)
- 종토세과표 96년 공시지가 적용(실효세율 2~3배 인상)
- 부가세 면제대상 축소
- 국민은행 94~95년 민영화
- 금융실명제 조기시행
- 30대재벌 상호지보 축소(96년 3월 자기자본 2백%)
- 고용보험제도 95년 도입
- 토지용도지역구분 단순화(현행 10개→5개)
- OECD가입 실현(96년 말)
- 주택 매년 50만~60만호 건설(98년 주택보급률 90%)

자동차 주행세 도입 검토

- 제2금융기관 지분한도 설정, 은행지분한도는 축소
- 진흥지역내 논 경지정리 완료(98년 17만4천 ha)
- 농어민 연금제 실시 방안마련(94년까지)
- 서울과 평양에 경제사무소 설치등등이다.

이러한 내용을 갖고 있는 「신경제 5개년 계획」을 구체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정책방향이나 기본철학은 무엇인가 등등에 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경식 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의 말을 빌려 「신경제 5개년 계획」의 추진 전략을 우선 살펴보기로 한다. 그것은 우선 국민의 참여와 창의가 유

발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정당한 보상의 보장을 뒷받침 하기 위하여 경제제도 전반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고자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제도 개혁의 효과를 높이고 앞당기기 위하여 모든 경제 주체에 대한 의식개혁을 제도개혁과 병행·추진해 나가리라는 것이 그의 말이다.

돌이켜 보건대 우리 경제는 80년대 이후 경제 규모가 확대되고 경제구조도 복잡해진다 대내적인 민주화의 진전과 대외 경쟁의 침체화로 인하여 정부주도에 의한 경제발전은 점차 한계에 부딪치게 되었다는 것이 김영삼 문민정부의 진단이다.

대내적으로 이런 경제환경에 놓여져 있을 뿐만 아니라 이와함께 국제적으로 볼 때에는 선진국들은 개방을 주장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지역주의, 무역 및 기술보호주의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그리고 중국과 아세안 제국등 후발개도국들도 빠른 속도로 우리를 추격하면서 경공업제품시장을 잠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점점 더 가속화 될 것으로 보여진다.

우리 경제는 이처럼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신경제 5개년계획 기간중에도 안팎으로 더 많은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보이고 있다.

경제전쟁이라고 할 정도로 치열해 지고 있는 경제력 경쟁, 그리고 세계 속에서의 한국의 위상제고와 세계경제질서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국제경쟁력의 제고와 함께 경제의 세계화·국제화를 능동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국민소득이 1인당 1만 달러를 넘어서면서 경제구조나 국민생활의 질적 변화가 이루어지고 96년 OECD가입을 목표로 각종제도를 국제화 해 나가는 과정에서 많은 과제가 새로이 제기될 것이 전망되고 있다.

또한 세계적인 사회주의 체제의 붕괴와 북한의 경제적 곤란가중 등 남북통일 가능성도 어느날 갑

자기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도 커지고 있는것등, 이에 대비한 우리 경제의 역량을 키워나가는 것도 또한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는 것이다.

이런 저런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생각해 볼 때에 우리 경제에 있어서는 앞으로 2~3년간은 아주 새로운 도약을 통해서 구조개혁을 하고 국제 경쟁력을 키워서 선진경제로 진입하느냐 혹은 그게 아니고 지금의 상태에서 정체하느냐를 결정짓게 될 아주 중요한 시기임을 알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지금은 국민 모두가 새로운 각오로 경제선진화를 위한 새로운 경제질서와 구조의 틀을 짜 나아가야 할 때라 할 수 있다.

정부가 목표로 하고 있는 「신경제」는 바로 이와 같은 의미에서 모든 국민의 참여와 창의를 경제발전의 원동력으로 하는 새로운 경제운용의 틀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정책의지를 담고 있다고 한다.

앞으로 정부는 「신경제」를 크게 나누어, 첫째 정부의 지시·통제와 규제를 과감히 철폐하여 모든 국민의 참여와 창의를 최대한 발휘되도록 하고, 둘째 공정한 경쟁이 촉진되고 땀흘려 일한 만큼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한다.

그러면 이 「신경제 5개년 계획」의 주요 과제를 보면 우선 작지만 강한 정부를 만들려는 것이라 한다. 이는 재정개혁과 관련이 되는데 그 주안점은 재정지출의 낭비요인을 철저히 배격하고 국가경쟁력을 높이는데 보다 많은 재원이 배분되도록 함으로써 작지만 강력하고 효율적인 정부가 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구체적 검토과제로는 첫째 공무원의 정원을 동결 수준에서 관리하여 인건비 비중을 낮추고 일반행정비도 연 5% 이내에서 증액하는 등 고정적 경직적 경비의 비중을 줄이는 대신 절약된 재원은 공직자 처우개선과 함께 인력양성, 기술개발 사회간접자본 확충등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필요한 분야에 활용될 수 있도록 재정지출구조를 개선해 나가리라

한다.

둘째는 늘어나는 재정수요를 뒷받침하기 위한 재정수입의 확충을 위해서 조세부담율이 97년까지 22~23% 수준으로 늘어나고 철도·우편요금 등 공공요금의 현실화를 통해서 수익자 부담을 강화하여 재정부담을 줄여나갈 것이라고 한다.

한편 막대한 재정투융자사업 소요재원 마련을 위한 대책으로서 연금, 기금, 체신예금 등 공공자금 중 금융자산 등에 운용되고 있는 여유자금을 우선적으로 재정특용자 등 공공목적에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한다.

세계 사업성격이 유사한 각종 특별회계와 정부기금을 통폐합 하고 전년답습식에서 벗어나 장기적인 시각에서 예산 편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기재정계획제도를 활성화 하는 등 재정제도를 합리화해 나갈 것이라고 한다.

넷째 91년 이후 지방재정 규모가 중앙재정규모를 능가할 정도로 지방재정 능력이 크게 확충되었기 때문에 국가사업으로서 지방고유 사업의 성격을 갖고 있거나 지방에 이익이 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지방비 부담을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한다.

그리고 세계개혁을 적극 추진하되 재정수입을 안정적으로 확보함과 아울러 조세의 공평성·효율성을 높이는데 주안점을 두리라 한다. 이에 따라

첫째 조세부담률을 92년 19.4%로서 97년까지 22~23% 수준으로 높여 나가되 새로운 세목을 만들기 보다는 비과세·감면대상의 축소·폐지, 금융·자산소득에 대한 과세강화를 통해서 세수를 확보하리라 한다.

둘째 재산소득과 금융소득 뿐만 아니라 번칙 상속·증여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여 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공할 것이며 특히 그 기반이 되는 금융실명제는 반드시 실시하리라 한다. 이와 함께 종합토지세의 과표현실화를 통해 96년까지 토지에 대한 평균 실효세율을 현재의 2~3배 수준으로 제고해 나가되 납세자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중산층

이하에 대해서는 세부담이 크게 늘어나지 않도록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가리라 한다.

세째로 현행 조세감면제도를 제로 베이스에서 전면 재검토하여 전반적으로 축소해 나가되 다만 기술개발, 생산성 향상, 중소기업등 지속적 성장을 위해 불가피한 지원은 실효성이 제고되는 방향으로 개선해 가리라 한다.

네째 세제는 단순화하고 세정을 과학화하여 세금포탈과 부조리의 소지를 제거해 나감과 아울러 세정체제도 납세자의 편의위주로 개편해 나가리라 한다.

「신경제 5개년 계획」의 주요내용중 핵심을 이루는 금융개혁에 있어서는 금융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금융기관의 소유구조등 금융산업을 개편하고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서 첫째, 금융산업에 대한 규제를 과감히 완화하여 자율성을 높여 나가되 특히 정부나 재벌등 대주주의 간여가 배제되도록 은행장 선임방식을 개선하고 금리자유화도 금년에 대부분의 여신금리가 자유화되는 2단계 금리자유화를 시작으로 앞으로 이미 제시한 일정에 따라 차질없이 추진하여 96년까지 요구불 예금을 제외한 모든 여신금리를 자유화해 나갈 것이라 한다.

둘째로 정책금융을 축소 또는 폐지해 나갈 것이나 꼭 필요한 정책금융은 재정이나 특수은행을 통하여 공급해 나가면서 금리우대는 단계적으로 폐지하여 자금의 이용 가능성 측면에서만 우대 지원하도록 하리라 한다.

세째, 여신관리대상 기업범위를 10대 계열기업군으로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기업투자 및 부동산 취득 승인제도를 폐지하여 여신관리제도를 계열기업군의 편중여신을 억제하기 위한 본래의 목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개선하리라 한다.

네째, 금융시장 개방을 맞이하여 우리의 금융산업이 경쟁력을 갖추어 나갈 수 있도록 고유업무와



연계성이 있는 부수업무는 겸영을 허용하는 등 금융기관간의 지나친 업무영역 분할은 재조정해 나가되 원칙적으로 은행, 증권, 보험의 큰 골격은 유지되도록 할 계획이라 한다.

다섯째, 금융기관의 자금고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은행의 동일인 주식소유한도(8%)를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비은행 금융기관에 대해서도 동일인 지분한도의 신설을 추진하는 한편 제2금융권은 지배주주에 대한 여신한도를 신설하고 자기계열 기업군에 대한 여신한도도 축소해 나가리라 한다.

그간 인력양성제도는 입시위주의 교육에 치우쳐 있어 산업계의 인력수요를 제대로 충족시키지 못하는 문제점이 노출돼 왔기 때문에 이번에 기술 및 기능인력양성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개편방안을 마련하리라 한다. 이를 위해 공업계 고등학교의 학생수를 대폭 늘리고 대기업 훈련원 100개를 신설하고 전문대 입시에서 실업고생은 인문과목시험 없이 진학할 수 있도록 하고 기술대학 설립을 추진하리라 한다.

그리고 토지제도개선의 주안점은 복잡다기한 현행 보전위주의 규제제도를 개발과 보전이 조화되는 방향으로 개선하고 투기억제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가를 안정시키는데 두고자 한다는 것이다. 이를 현행국토이용관리법상 10개 용도지역을 도시·준도시·농림·준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등 5개로 단순화하고 행위제한도 대폭 완화하여 개발가능 토지를 전국도의 16% 수준에서 30~40% 수준으로 확대하고, 농지·산지관리체계를 개편 개발토록 하고 개발제한지역의 주민 불편해소와 생업유지에 역점을 두어 확대 개편하리라 한다. 그리고 용도변경에 따른 지가상승 이익도 개발부담금으로 환수하도록하며 수도권내 5개권역을 3개권역으로 단순화하고, 과밀부담금등 경제적 규제방식으로 전환해 나갈 계획이다.

산업정책의 기본적인 주안점은 정부와 민간의 협

조하에 선진국형 산업구조의 정착을 앞당겨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키리라 한다. 이를 위해서 기술 및 지식집약산업, 유망첨단기술산업, 환경친화적 중심으로 산업구조 조정을 촉진하고 아울러 산업의 자립기반을 확립하기 위한 소재 부품 자본재산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리라 한다.

그리고 중소기업을 기술개발·자동화·정보화에 대한 지원을 통해 자생력 있는 산업의 중추로서 키워나가고 낙후되어 있던 농업도 그간의 가격·중산위주 정책에서 규모화·전문화 품질고급화등 핵심산업에 집중투자로서 구조개선 정책으로 전환하리라 한다.

미래정보화사회에 대비하여 최소형 PC, 멀티미디어, 차세대 교환시스템 등 장래 경쟁력 확보가 가능한 분야를 위주로 한 선택적 접근을 통해 2001년까지 정보산업분야를 선진국수준으로 발전시키리라 한다.

기술개발이 산업경쟁력 향상과 보다 긴밀하게 연계될 수 있도록 산·학·연 협동연구체제의 확립과 대규모기업집단의 무분별한 업종다각화를 지양하고 주력업종을 전문화하도록 주력기업을 세계일류기업 수준으로 대형화·전문화 시켜 나가리라 한다. 산업정책운용방식도 민·관의 협조하에 업종별 발전계획을 실천하리라 한다.

대외정책의 기본방향은 이른바 세계 경제 전쟁시대를 받아 국제화와 개방화의 과감한 추진으로 우리 경제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국제시장기반을 확충시켜 나가리라 한다. 이에 무역의 지속적인 확대와 투자촉진, 외국인의 서비스 분야 확대에 대한 대비, 개방화·국제화의 진전과 함께 우리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누적통상압력을, 국제적 협상을 통해 합리적으로 해소시키고 96년말까지 OECD가입을 적극 추진하리라 한다. 그리고 EC, NAFTA 등에 대하여 지역별 특성에 맞는 진출전략을 수립 추진하고 이들 지역경제권의 역외권에 대한 차별조치에 대하여는 이해관계국과의 공동대응노력을 강

화해 나가리라 한다.

#### 4. 기업의 생존 · 발전전략

위에서 국내외에 걸친 환경변화와 특히 정부가 앞으로 전개하리라 공약한 「신경제 5개년 계획」에 관한 주요내용을 아주 상세히 설명하였다. 지금 「신경제 100일 계획」이 지나고 「신경제 5개년 계획」이 진입하고 있는 93년 하반기에 들어 「신경제 100일 계획」이 기대한 만큼의 성과가 없었고 「신경제 5개년 계획」이 실시되고 있는 이 마당에 있어서도 별로 성과가 없지 않느냐 해서 비판이 점점 높아져 가고 있고 성장률이 뚝 떨어지고 물가로 불안한 위에 국제수지가 적자로 반전 증가하고 있어서 이대로 가면 큰일이 아니냐 하는 비판이 나오고 정부도 사회간접자본 개발중심의 경기부양정책에 힘 쓰리라는 대책마련의 말이 나오게끔 되어 있는 어려운 국면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 이 글을 쓰고 있을 때의 현실이다.

그러면 이런 국면에 기업의 생존 성장전략은 무엇이었는가. 우선 기업은 국내외에 걸친 기업환경이 그 어느 때 보다도 어렵다는 기업현실을 직시하고 긍정적 적극적 문제해결적으로 대응하는 기본 자세를 굳혀야 한다.

그리고 둘째로 모든 경제는 실질적으로 기업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업이 많고 크고 병들지 않는 즉 부실화 하지 않으면서 기업에 부과된 책무를 착실히 전개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먼저 살아 남아야 하고 계속 발전해서 세계적 관점에서도 최고화 일류화하는 질적 향상에 역점을 두어 우리 인류에 꼭 필요한 상품이나 서비스를 값싸고 좋은 품질의 것이 최고의 거래조건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최고화 일류화 전략이 중요하다.

세째는 기업경영이 정부주도가 아닌 민간주도로 지향하면 민간화, 자율성제고, 민간의 창의력 존중에 둔다고 하기 때문에 민간의 창의력 발휘에 역점

을 두고 정부의존적 태도를 불식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이런 뜻에서 기업은 정부의존을 탈피하는 자생력을 육성하면서 기업구조개선을 통한 기업의 국내외에 걸친 경쟁력강화에 힘써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네째는 국제환경이 자율화를 요구하면서 자국은 보호화를 촉진하고 있으며, 세계화 국제화는 필연적 과제가 되고 있다. 이에 OECD 가입과 1만 달러 이상의 국민소득 국가가 될 것이 예상되므로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부가가치를 높이는 기업경영을 하지 않으면 생존유지와 지속적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는 점에 비추어 기술혁신 기술투자의 증대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조건으로 생각된다. 최첨단 기술이 아니라도 좋다. 우리 기업의 조립능력은 국제적 수준에 이르고는 있으나 부품과 소재, 엔지니어링과 기계, 그것도 고급분야가 취약하기 때문에 이들 취약부분을 보완시키는 중간기술의 혁신을 현장 투자 확대가 그 어느 때 보다도 중요한 것으로 보여진다.

다섯째로 김영삼 정부는 깨끗하고 맑은 정치를 내걸고 있기 때문에 기업경영도 도덕성을 바탕으로 한 맑고 깨끗한 기업경영 즉 유리창경영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이런 뜻에서 기업경영은 원리원칙에 입각하는 원리원칙경영이 되어야 하며 이런 관점에서 기업혁신이 이루어져야만 한다.

여섯째는 공정거래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경제력 집중의 배제와 중소기업의 지원중대로 들어가겠지만 자력갱신의 노력이 없는 기업에는 그림의 떡이요 조금도 힘이 되어질 수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

「신경제 5개년 계획」 너무나 화려하고 모든 것을 다 잘하려는 감이 있으나 「주주노력」 없이는 그림의 떡이 되기 쉽다는 것을 기업경영관련자는 명심해야 할 것이다.